

[종합·해설]

# 정치권 '폭로' 회오리

## 우리당 "별장파티 이명박-선회장 특수관계"

## 한나라당 "정치적 공작...제2의 김대업 사건"

소강상태를 보이던 이명박 서울시장의 '황제테니스' 논란이 16일 열린 우리당의 '별장파티' 의혹제기에 따라 5.31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우리당이 이날 '별장파티' 의혹을 폭로하며 이 시장과 선병석 전 서울시 테니스협회 회장간의 '특수관계'에 초점을 맞춰 공세를 가하고 나선 데 대해 한나라당은 "제2의 김대업 사건"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간 가파른 대치전선이 형성되고 있는 것.

우리당은 이 시장의 남산 실내테니스장 '독점사용' 논란의 중심인물이

기도 한 선 전 회장과 이 시장의 '특수관계'를 파헤치는데 '별장파티'가 중요한 '물증'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정치공작적 의혹이라며 응수하고 있는 형국이다.

◇"별장파티 뭐가 있다. 순수 동호회 모임인가"=우리당은 이 시장이 '황제테니스' 문제가 논란이 됐을 당시 선 전 회장과 관계에 대해 "정확한 이름도 처음 알았다"고 했으나, 선 전 회장과 지난 2003년 경기도의 한 별장에서 함께 파티를 했던 것으로 드러난 것은 두 사람간의 '특수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당은 구체적으로 지난 2003년

10월 이 시장의 처남과 현대 출신 인사들이 공동 소유한 경기도 가평의 한 별장에서 이 시장과 선 전 회장이 함께 참석한 파티가 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측은 별장파티가 우리당이 의심을 두고 있는 성격의 여흥은 아니었고, 다만 처남 소유의 전원주택에서 가진 테니스 동호인 모임의 아우회 수준이었다고 반박했다. 역시 선 전 회장이 동호인 모임이었다고 "입을 맞췄다".

그러나 '파티 개최 시점' 관련, 이 시장측은 우리당이 주장한 시점보다 1년 가량 뒤인 2004년 7월이라고 해명했다. 선 전 회장이 처음에는 "약간

### ■이명박 서울시장 '별장파티' 폭로 관련 3인 주장

구분	안민석 의원	이명박 시장	선병석 전회장
모임날짜	2003년 10월	2004년 7월	2004년 10월
모임성격	별장 파티	동호인 아우회, 음식 각자 준비	동호인 아우회, 음식 각자 준비
이시장 참석 시간-일정	여흥을 즐겼다	오후 10시경 저녁식사후 다들 테니스	오후 4, 5시경 테니스후 저녁식사
여성 참석	선회장이 30대 중반 모택동 정략강사 등 여성 참석 주선	동호인 모임에 여성도 있었을 것	4, 5명, 동호인 선병석 참석, 외 부인은 무명가수 부부
모임장소 소유	이시장 등 현대고위간부 출신 7명 공동 소유	이시장 처남 소유	처음에 이시장 소유로 알려졌다가 나중에 처남소유인 줄 알았음
모임장소 성격-규모	별장	건평 25평 규모 전원주택	건평 30~40평 단층건물, 지하층 있음, 뒤에 테니스코트기 있고 넓게 4차기장 붙어 있음
이시장-선회장 관계	파티 함께 즐긴 정도의 특수한 관계	1년전부터 테니스 친 사이로 인연은 있을, 성은 같지만 이 둘 색서는 정확히 기억 못함	서울시테니스협회장, 생활체육회장 하도 알고 지냈던 유명인사 중 한명

◇이시장-선병석 관계=우리당은 "별장파티"를 함께 할 정도로만 "특수관계"라는 주장을 거듭 펼쳤다. 그동안 이 시장이 선 전 회장을 잘 모른다고 말한 것은 파문 확산을 위한 거짓 해명에 불과했다는 주장이다.

"별장파티" 의혹을 제기한 안민석 의원은 "황제테니스의 핵심 의혹은 선 전 회장과 이 시장과의 관계 부분"이라며 "이 시장이 개인적으로 모른다"고 했다. 별장파티 건으로 특수한 친분관계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측은 이 시장이 선 전 회장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이름을 잘 몰랐던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선 회장"으로 불렀기 때문에 이를 적는 정확히 몰랐다는 설명이다. 선 전 회장이 "특수한 관계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여흥의 성격과 여성참석=우리당은 선 전 회장이 30대 중반의 모택동 성악강사 등 여성의 참석을 주선했고, 여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측은 "테니스 동호인 모임의 수련회에서 이 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집에서 만들어진 음식으로 함께 식사하고 다음날 아침 테니스 친 것이 전부"라며 "여흥" 쪽에 무게를 두지 않았다.

그러나 선 전 회장은 "맥주와 양주를 조금 사갔고, 야외에서 밴드하고 노래를 조금 불렀다"고 말해 어느 정도 수준의 "음주가"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이 시장측은 여성의 참석여부에 대해서는 "동호인 모임에 여성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 전 회장은 "여성 성악과 교수는 동호인 중 한 명이며, 당시 여성은 4-5명 정도였고 (동호인이 아닌) 외부인은 무명가수 부부가 전부였다"고 해명했다.

선 전 회장은 "오후 4-5시경 테니스를 친 후 저녁식사를 했으며, 여성은 여성끼리, 남성은 남성끼리 잤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일본 왜 독도 탐사 나섰나

## 6월 '해저 지명' 국제회의 앞두고

# 영토주장 근거 만들기

일본 정부가 독도 주변 해역 해저수로 탐사를 추진하고 있어 한·일간 긴장의 파고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탐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일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중국과는 아스쿠니문제로, 러시아와는 북방 4개성(일본명 북방영토, 러시아명 쿨릴랜드) 문제로 마찰을 내고 있다. 야당은 '외교고립'과 '근린외교 실패'로 돌아붙이고 있다.

일본이 탐사를 추진키로 한 것은 지명을 둘러싼 주도권싸움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6월에 독일에서 해저 지명을 논의하는 국제회의가 열리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풀이했다.

회의 개막전에 독도 주변 해역 해저수로에 일본이름을 붙여둬으로써 선수를 친다는 것이다. 영토주장의 근거를 마련해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속셈인 셈이다.

일본 외무성 간부도 "해저지명을 논의하는 국제회의 전에 측량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전자정부 서비스 홍보 행정자치부 직원들이 16일 서울 청계천 광장에서 정부인터넷 민원서비스, 전자투표 서비스 등 전자정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나라 "사상·도덕성 등 전방위 검증"

## 우리당 "정치적 공세 단호하게 대처"

### 오늘부터 한명숙 총리 지명자 국회 인사 청문회

17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한명숙 총리 지명자(사진)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놓칠 수 없는 '호재'를 맞은 한나라당은 공격포인트를 특정하지 않고 '사상'과 '능력', '도덕성'을 전방위적으로 검증하겠다고 칼을 갈고 있다. 이에 맞서 열린우리당은 주로 정책 검증에 주안점을 두면서 한나라당의 이념·사상검증 등 정치적 공세에는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사상·이념=한 지명자의 '진보적 편향성' 여부가 주된 검증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북한인권과 국가보안법 개폐 등 한 지명자의 이념성향을 엿볼 수 있는 '민감한 현안'을 집중 질의하며 우회적으로 사상검증을 시도할 방침이다.

특히 한 지명자가 68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79년 중앙정보부가 용공 사건으로 발표된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 남편 박성준 성취대 교수가 처벌받은 통역당 사건 관련 기록을 제출받아 검토를 마



쳤다.

이에 대해 우리당은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은 과거 중정의 고문에 의한 조작극임이 드러나 민주화운동으로까지 인정된 사건"이라며 차단막을 치고 나온다는 전략이다.

◇직무수행 능력=총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만한 경륜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가 최대 검증포인트다.

한나라당은 한 지명자의 행정경력

이 여성부와 환경부 장관을 재임한 것이 전부여서 국정 전반의 업무를 조정해낼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우리당은 한 지명자가 여성부와 환경부 장관을 재임하면서 '독부러진' 능력을 보여줬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환경부장관 재임시 추진한 사업들이 우려곡절을 겪은 것은 '밀어붙이기'보다는 '합리적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한 지명자의 스타일을 반영한 것이라고 옹호하고 있다.

◇도덕성·자질=현재 군 복무 중인 한 지명자의 아들 박모씨의 보직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박씨가 부대장의 당번병 보직을 받는 과정에서 주특기가 무원칙하게 변경되는 등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며 한 지명자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또 1조원 규모의 전문학적 단단계 사기를 저지른 모 단체와 관계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계획이다.

이에 대해 우리당은 박씨의 보직변경은 적법한 군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고, 단단계회사 주회 행사 참석의 경우 단순히 지역구 행사에 불과했다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비정규직법안 처리 4월 국회에서도 불투명

## 노동정책 시행 차질 우려

비정규직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공천비리파문 등으로 불투명해지면서 비정규직법은 물론 내년 1월로 예정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주요 노동정책의 시행까지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6일 노동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과 14일 비정규직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회의장 점거

로 심의 자체가 무산됐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한결같이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비정규직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주무 부처인 노동부의 이상수 장관마저 최근 시행령 제정 등의 후속 절차를 감안할 때 4월 임시국회가 '데드라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공천비리 파문이 여야 간 공방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

이는 가운데 5·31 지방선거를 앞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과연 정치적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법안을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선 노동계 안팎에서 회의적 견해가 늘고 있다.

만의 하나 4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 확실시된다. 노사정은 지난달 11개월만에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로드맵 논의에 들어가기로 합의했지만 비정규직법 처리가 지연되자 논의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